

“국방비 지출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국방비 지출이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일본정부는 원조계획을 세울때, 군사비 지출이 많은 나라는 불리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마닐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시아 개발은행(ADB)의 입장은 다르다. ADB는 한 나라의 군사비 지출이 그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이 경제성장면에서도 정상급 국가들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ADB는 지적하면서, “시장경제체제와 대외지향적 정책을 추구하고 물가의 왜곡현상을 최소화하는 국가에서는 군사비 지출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있다.

ADB도 동남아 국가들이 재정적자와 低성장, 물가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군사비 지출의 증가세가 GNP(국민총생산)의 증가보다 빠른데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들 국가들의 전체적인 경제정책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국방비 때문에 사회부문에 대한 정부예산이 줄어들므로 가난을 구제하는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으

나, ADB는 자체연구결과 이와같은 주장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아시아 개발은행은 한국, 미얀마(舊 버어마), 싱가포르, 태국의 경우 그들 예산의 18~25%를 국방비로 지출하지만 건강과 교육분야에도 비슷한 비율인 19~26%를 지출한다고 밝혔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와 같이 군사비는 많이 지출하지만 중앙정부 예산의 4%정도만 교육과 건강에 투자하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회부문에 대한 적은 투자는 그나라의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군사비를 우선 지출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ADB는 주장한다.

이론적으로 볼때 만일 인도와 파키스탄이 군사비를 20% 줄이면 건강과 교육분야의 예산은 각각 80%와 170% 늘어날수 있다. 그러나 군사비 지출을 줄인다고 건강과 교육예산이 당연히 늘어난다는 보장이 어디있느냐고 ADB는 주장한다.

여하튼 국방비 지출을 살펴볼때 인도는 1년에 100억불을 군사비로 쓰는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군사비 지출국이며 한국이 80억불, 대만과 중국이 각각 64억불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국방비가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파키스탄이 아시아에서 1위이고 싱가포르와 대만이 각각 2, 3위이며, 국민 1인당 국방비 지출액으로 보면 싱가포르가 1위, 대만이 2위, 한국이 3위이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고도 경제적 성공을 거둔 實例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국방예산과 복지부문에 예산 사이에 명백한 연관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정책 당국자들은 거대한 국방예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ADB는 결론을 맺고 있다*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2. 4. 30일호

아시아 國 방위비 지출

국 가	1인당 (1988~90)	정부지출(1989)
싱 가 포 르	520(US \$)	21.2(%)
대 만	320	-
한 국	189	24.9
말 레 이 시 아	100	-
태 국	40	17.8
파 키 스 탄	26	29.5
스 리 랑 카	12	5.4
인 도	12	17.2
필 리 핀	10	13.0
인 도 네 시 아	10	8.3
미 안 마	8	18.7
중 국	6	-
네 팔	3	5.2
방 글 라 데 시	3	10.0